

고객 없이 딜러들만 분주… “반도체 특수 모르겠어요”

용인·수원·인천 중고차 매매단지

호황 전망과 달리 현장 분위기 차분
기대보다 대기업 시장 진출 우려
“상생 말하지만 나중엔 달라질 것”

“중고차 가격은 조금 인상됐지만 매
출까지 대폭 증가하지 않았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중고
차 매매단지 ‘오토허브’에서 만난 직원
들은 최근 중고차 시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량 조절에 돌입하면
서 국내 소비자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 신차 구매까지 6개월 가량 대기하
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차량 가격 인상과 매
출 증대 등 호황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변화
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

◆중고차 시장 호황?…‘일부에 불과’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새로 등록된 중고차의 수는 160만대로
지난해에 비해 20.1%가 증가했다. 수
요 급증과 공급 부족으로 인기 중고차
의 가격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용인과 수원, 인천 등 주요 중
고차 매매단지에서 만난 직원들은 반도
체 특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
다. 용인 오토허브에서 만난 A 상사 대
표와 B 상사 대표 모두 최근 차량용 반
도체 부족 현상으로 중고차 가격은 인



용인 오토허브 지하에 주차된 매물 차량.



/이원혁 수습기자 수원 중앙자동차매매단지



/양유경 수습기자 신인천자동차매매단지에 중고차들이 주차돼있다. /강준혁 수습기자

상됐지만 매출이 대폭 증가한다고 차
감될 수준으로 상승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A 상사 대표는 “중고차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펠리세이드, K5, 쏘렌토 등 인기 차종
은 가격 방어가 더 잘되는 편이라고 설
명했다. 이어 “신차 출고까지 상당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가 증가하
지만 매장보단 엔카나 케이카 같은 플
랫폼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고 있다”고 말했다.

B 상사 대표는 중고차 가격과 매출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오른 건 사실이라고 말한다. B 상사 대
표는 “매출은 재작년 대비 5%~7% 정
도 올랐다”고 하면서도 “수익률은 중고
차 매입가의 상승으로 오히려 그전보다
떨어졌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앙자
동차매매단지 주차장에서 만난 딜러 김
광훈씨는 “매장엔 전부 딜러들이고 평

일·주말 모두 사람 없긴 마찬가지다”며
“반도체 특수는 모르겠다”고 중고차 시
장의 반도체 호황을 둘러싼 소문에 대
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에 개장한 국
내 최대 수준의 중고차 매매단지 겸 복
합공간인 ‘SK V1 모터스(이하 SK)’나
‘도이치오토플(이하 도이치)’도 조용
했다. SK에 입점한 최철호(49)씨는 오
히려 반도체 수급난이 악재(惡材)라고
말했다. 그는 “신차가 많이 팔려야 중고
차 시장도 운영이 잘된다”며 “코로나19
로 수급난이 발생하면서 차를 안 팔고
버티면서 중고차 순환이 안된다”고 지
적했다.

반면 경기도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신부평자동차 매매단지의 분위기는 사
뭇 달랐다. 중고차매매단지 직원은 “평
일에는 한산하지만 주말에는 상담을 받
기 위해 대기하는 고객도 있다”며 “원래
는 이 정도로 호황을 띠진 않았는데 지
난 3개월간 매출이 대략 5% 증가했다”
고 말했다.

실제 이날 매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
과 인천의 중고차매매단지에는 차를 구
매하려는 주말 예약 고객들이 만석이었
다. 이날 중고차매매단지에 상담을 받
으려 온 정은석(48·경기 부천) 씨는 “실
제 와서 보니 중고차도 괜찮았다”며 “아
직 구매할지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저렴
한 가격, 바로 받을 수 있는 점이 중고차
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보다 대기업 진출시 ‘전멸’

오히려 중고차 시장에서는 반도체 특
수에 대한 기대보다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가 높았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적
합업종으로 지정돼 그동안 대기업의 시
장 진출이 불가능 했지만 지정 기간이
2019년 2월로 종료됐다. 현재는 국내 완
성차 5개사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준비
하고 있다.

중고차 판매자로 종사하는 강은수
(가명) 씨는 “왜 대기업들이 우리의 영
역까지 넘보는지 모르겠다”며 “그들은

상생을 말하지만, 처음만 그렇게 말하
고 나중에는 분명히 돌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협회장 김지
호(51)씨는 6년, 12만km라는 조건 자체
가 이미 시장에서 주효한 일짜 상품들
이라 지적했다. “현대차가 정말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싶으면, (가만히 뒤도 알
짜인 상품들보다) 오히려 연식이 더 오
래된 차들을 잘 쳐줘야 하는 거 아닙니
까? 애초에 잘 못 만든 차, AS도 안 해
주는 차만 영세업자들한테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이 들어오면 영세
업자들은 최소 30% 이상 문을 닫을 겁
니다.” 도이치에 입점해 있는 권정균
(52)씨는 현재 상황을 ‘공포’라는 말로
표현했다.

결국 “(대기업 진출을) 미룰 순 있어
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중고차
업체들은 소비자 신뢰 쌓기에 집중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강준혁·양유경·이원혁 수습기자
ysw@metroseoul.co.kr

중심상권서 밀려난 ‘휴대폰 메카’… “단통법에 제대로 경쟁도 못해”

용산 전자상가 휴대폰 대리점

“불법채널은 성지라 불리며 추양
법 지키는 사람들만 죽어 나가”

용산 전자상가의 다소 후미진 곳에
위치한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밀집한 골
목은 오가는 사람이 없이 한산했다.

한 때는 용산 전자상가가 ‘휴대폰 메카’로 명성을 날렸지만, 단통
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언택트) 현상으로 휴
대폰 구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휴대전화 판매점주들에게
서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사거리에 위치
한 매장 중에는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 자체가 거의 없었고, 단통법의
영향으로 많은 휴대폰 판매점들이 문을
닫았다.

◆단통법으로 휴대폰 판매점들 폐업 이 어져… ‘휴대폰 성지’로 판매 음성화

한 휴대전화 판매자는 단통법 시행으
로 휴대폰 판매점이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주장
했다.

A씨는 “예전에는 주변에 휴대전화
판매점이 많았지만 단통법 이후에 많이
사라졌다”며 “법대로 공시지원금에 추



대로변에서 떨어진 곳에 휴대전화 판매점이 밀집해 있지만 이용자 없이 한산했다. /한창대 수습기자

가지원금을 지원해도 찾는 사람이 없는
데, 어디선가는 100만원짜리 휴대전화
가 20만원, 30만원에 팔리지 않냐”고 반
문했다. 그는 “법을 지키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죽어 나간다”고 푸념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보조금이 차별
적으로 지급되면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2014년 10
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판매처는 이동통
신사의 공시지원금에 대해 공시지원금
15%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7년이 지난 지
금, 휴대전화 판매는 오히려 음성화됐
다.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 휴대

폰을 직영점보다 더 싸는 ‘휴대폰 성지’
들에 대한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속속
퍼지면서, 포털에서 휴대폰 성지를 검
색하면 후기는 물론 시세표, 관련 커뮤
니티까지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A씨는 이에 대해 “그런 곳들은 계산
기 두드려서 가격 보여주고 그런 식으
로 휴대전화를 판다”며 “법적인 공시지
원금에 추가지원금으로는 가능하지 않
은 금액으로 휴대전화가 판매되는 건
통신사가 성지에 리베이트를 한다고 생
각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26
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통해 휴
대전화 판매처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2배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휴대폰 판매자들은 이 개선안
에 ‘의미가 없다’며 푸념한다. B씨는
“단통법이 있지만 아직 그 이상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 판매가 암암리에 이뤄
지고 있다”며 단통법 개정으로 추가지
원금 한도를 높인다 해도 다시 그 이상
의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이
유로 들었다.

◆단통법 개정안, 소비자·판매자 단체 등 반대 이어져… “차라리 폐지” 주장 커져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 등
11개의 소비자 단체가 소속된 한국소비
자단체협의회는 29일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
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
신사의 마케팅비는 감소했지만 불법보
조금은 끊이지 않았고,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불법채널을 통한 소비자 차별이
계속됐다”며 “단통법이 소비자 편의 없
이 이동통신사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
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대리점주의 단체인 전국이동
통신유통협회(KMDA)도 최근 성명서
를 통해 “추가지원금 상향으로 통신사
는 추가지원금 보존을 위해 공시지원금
을 낮출 수 있고 현행 추가 지원금 15%
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중소유통망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판매자·
소비자 단체는 물론 이통사도 단통법을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점점 더 커져… 외국인 고객 발길 ‘뚝’

코로나19 역시 오프라인 휴대전화 판
매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판매자 B씨는 “코로나 상황 초기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최근 매장을 이
용하는 고객이 많이 줄었는데, 새로운
휴대전화 기종이 나오지 않는 시기이기
도 하지만 갈수록 코로나 여파가 영향
을 미친다”고 말했다.

중고 휴대전화도 판매하는 A씨는
“코로나 영향으로 외국인 고객이 줄었
다”며 “외국인 고객이 중고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종종 오곤 했는데 요즘은 별
로 없다”고 전했다.

이 뿐 아니라 자급제 휴대전화를 구
매해 직접 통신사를 선택, 개통하는 소
비자들까지 늘어나면서 악재는 더 커지
고 있다. 자급제 휴대폰을 구입하는 이
유에 대해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자급
제 휴대전화를 사서 알뜰폰으로 개통하
면 3만원대에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윤정 AI전문기자, 한창대 수습기자 echo@